



2023. 9.

국회예산정책처 | 국정감사 대비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현황과 중점 주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2023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한지은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강지훈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 현황과 중점 주제 】

2023.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9. 1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정부 부문 총지출의 116%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이나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공급, 주거 정책 및 정책금융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2권부터 4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등에 대한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가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차례

Contents

현 황

1. 공공기관 일반현황	2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2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13
다. 공공기관 재무현황	21
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28
마. 공공기관 인력 현황	32
바. 공공기관 장애인 인력 현황	36
사.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41
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45
자.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46
차.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현황	52
카. 손실보전 공공기관 현황	57

중점 주제

1. 재무위험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2022년 재무건전성 악화	62
2. 공공기관 혁신계획 현황 및 주요 쟁점	65
3. 출자회사 이익률 및 배당률 관리 통한 적정 공공요금 부담 방안 마련 필요	70
4.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77
5.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81
6. 공기업·준정부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	86
7. 주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현황	89
8. 주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3
9.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주요 이슈	96

한글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 지정
 -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경영실적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공시, 경영혁신 등 적용
 - 기관의 규모, 정부지원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이 매년 이루어짐
 - 공공기관 중 직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
 -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그렇지 아니한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미만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자금관리 및 자금관리 위탁 기관은 자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부업무 위탁집행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관리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비해 운영상 자율성이 높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3.1.1.)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 (정원) 50명 이상 → 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박소희 예산분석관(02-6788-4683)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2개)	시장형 (13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19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 (55개)	기금관리형 (11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44개)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기타공공기관 (26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출연연구기관
총 347개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347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공기업 32개 기관, 준정부기관 55개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260개 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일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 공기업 수가 전년 대비 4개 감소(36개→32개), 준정부기관 수가 39개 감소(94개→55개)하였고, 기타공공기관은 40개 증가(220개→260개)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2022	2023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2	△4	-	-	△4
■ 시장형	15	13	△2	-	-	△2
■ 준시장형	21	19	△2	-	-	△2
② 준정부기관	94	55	△39	-	-	△39
■ 기금관리형	13	11	△2	-	-	△2
■ 위탁집행형	81	44	△37	-	-	△37
③ 기타공공기관	220	260	+40	+1	△4	+43
계	350	347	△3	+1	△4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 2023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58개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48개,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37개 순임

* 비교: 해당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참조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2023년)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법제사법 위원회 (3)	법무부(3)	기타 공공기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무 위원회 (3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25)	기타 공공기관(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 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II 권 참조
	공정거래 위원회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소비자원	
		기타 공공기관(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가보훈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 공공기관(2)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금융위원회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 공공기관(3)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기획재정 위원회 (5)	관세청 (1)	기타 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Ⅱ 권 참조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조폐공사	
		기타 공공기관(3)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 위원회 (22)	교육부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장학재단	Ⅱ 권 참조
		기타 공공기관(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4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Ⅱ 권 참조
		기타 공공기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 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방송통신 위원회 (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 공공기관(1)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 위원회 (3)	기타 공공기관(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외교통일 위원회 (5)	외교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국제협력단	Ⅱ 권 참조
		기타 공공기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2)	기타 공공기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방 위원회 (5)	국방부 (3)	기타 공공기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 (2)	기타 공공기관(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행정안전 위원회 (6)	경찰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도로교통공단	Ⅱ 권 참조
	소방청 (1)	기타 공공기관(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인사혁신처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32)	문화재청 (1)	기타 공공기관(1)	한국문화재재단	II 권 참조
	문화체육 관광부 (3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관광공사	
		기타 공공기관(2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업위원회 (34)	농림축산 식품부 (1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마사회	Ⅲ 권 참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공공기관(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1)	기타 공공기관(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4)	기타 공공기관(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해양수산부 (17)	준시장형 공기업(1)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15)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58)	산업통상 자원부 (41)	시장형 공기업(1)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 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 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Ⅲ 권 참조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준시장형 공기업(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기타 공공기관(13)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중소벤처 기업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 공공기관(8)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6)	기타 공공기관(6)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보건복지 위원회 (32)	보건복지부 (2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연금공단	Ⅳ 권 참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타 공공기관(24)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4)	기타 공공기관(4)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환경노동 위원회 (27)	환경부 (1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Ⅳ 권 참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소관 위원회	주무부처	기관유형	공공기관	비고
	고용노동부 (1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 공공기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3)	기타 공공기관(3)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토교통 위원회 (28)	국토교통부 (28)	시장형 공기업(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Ⅳ권 참조
		준시장형 공기업(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타 공공기관(15)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여성가족 위원회 (5)	여성가족부 (5)	기타 공공기관(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나.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2년 예산기준 791조 9,138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362개 공공기관)

- 2022년 전체 지출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25.7%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0%, 기타공공기관 20.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8.9%, 준시장형 공기업 13.3% 차지
- 2022년 지출 총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34조 4,118억원, 20.4%),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4조 3,402억원, △8.2%)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비중)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1,625,351	1,568,476	1,499,052	1,688,409	2,032,527 (25.7)	344,118 (20.4)
	준시장형	764,314	775,332	800,514	884,118	1,054,100 (13.3)	169,982 (19.2)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377,889	1,468,647	1,785,467	1,691,838	1,739,754 (18.9)	47,916 (△8.2)
	위탁집행형	1,215,163	1,319,334	1,481,074	1,743,215	1,599,713 (22.0)	△143,402 (△8.2)
기타공공기관		1,025,617	1,273,470	1,741,164	1,581,203	1,492,945 (20.2)	△88,258 (△5.6)
합 계		6,008,336	6,405,259	7,307,269	7,588,782	7,919,138 (100.0)	330,356 (4.4)

- 주: 1.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3. 기타공공기관인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임
 4.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3개 공공기관의 2022년 총지출은 203조 2,527억원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81%(2022년 기준) 차지

주요 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전력공사	701,086	692,737	652,380	765,284	898,670
한국가스공사	296,399	291,578	245,443	302,494	438,137
한국수력원자력(주)	113,534	107,504	125,448	121,311	140,889
한국남부발전(주)	63,663	60,867	52,235	67,850	88,935
한국서부발전(주)	61,370	60,895	59,554	57,050	80,258
5개 기관 계(A)	1,236,054	1,213,583	1,135,062	1,313,998	1,646,890
전체 시장형 공기업 합계(B)	1,625,351	1,568,476	1,499,052	1,688,409	2,032,527
비중(A/B)	76.0	77.4	75.7	77.8	81.0

주: 1.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9개 공공기관의 2022년 총지출은 105조 4,100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89.4%(2022년 기준) 차지

주요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토지주택공사	372,794	371,204	447,907	499,534	567,702
한국도로공사	102,818	113,397	128,334	133,166	145,130
한국철도공사	87,539	91,481	78,573	88,228	101,657
한국수자원공사	49,750	44,592	49,308	56,689	65,296
한국마사회	76,402	74,752	15,802	14,934	62,653
5개 기관 계(A)	689,304	695,426	719,924	792,550	942,438
전체 준시장형 공기업 합계(B)	764,314	775,332	800,514	884,118	1,054,100
비중(A/B)	90.2	89.7	89.9	89.6	89.4

주: 1.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11개 공공기관의 2022년 총지출은 173조 9,754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84.9%(2022년 기준)를 차지

주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주택금융공사	393,242	482,138	657,174	511,687	476,838
국민연금공단	214,390	235,253	264,614	299,694	314,701
예금보험공사	236,366	224,269	250,037	252,517	279,015
공무원연금공단	218,081	209,657	227,480	232,064	267,993
신용보증기금	89,281	85,085	111,777	112,675	138,095
5개 기관 계(A)	1,151,361	1,236,403	1,511,083	1,408,638	1,476,641
전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합계(B)	1,377,891	1,468,647	1,785,467	1,691,838	1,739,754
비중(A/B)	83.6	84.2	84.6	83.3	84.9

주: 1.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7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2년 총지출은 159조 9,813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82.9%(2022년 기준)를 차지

주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767,529	864,999	946,569	1,043,015	1,000,998
국가철도공단	108,611	96,203	92,127	103,473	102,974
한국장학재단	83,104	80,039	85,793	83,195	92,031
한국연구재단	51,363	58,833	71,614	77,850	83,870
한국농어촌공사	37,687	38,501	41,601	44,518	45,621
5개 기관 계(A)	1,048,294	1,138,574	1,237,706	1,352,052	1,325,495
전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B)	1,215,163	1,319,334	1,481,074	1,743,215	1,599,813
비중(A/B)	86.3	86.3	83.6	77.6	82.9

주: 1.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2.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272개 공공기관(12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2년 총지출은 149조 2,945억원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타공공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71.6%(2022년 기준)를 차지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소기업은행	334,529	457,004	563,547	496,935	486,357
한국산업은행	206,576	289,150	538,680	438,543	325,05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0,137	93,280	90,529	130,755	132,940
한국수출입은행	87,763	87,330	161,272	95,121	104,290
한국해양진흥공사	5,840	19,699	14,136	16,613	20,838
5개 기관 계(A)	724,845	946,463	1,368,165	1,177,967	1,069,474
전체 기타 공공기관 합계(B)	1,025,617	1,273,470	1,741,164	1,581,203	1,492,945
비중(A/B)	70.7	74.3	78.6	74.5	71.6

주: 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2018년 7월 설립
 2.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3.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수입은 2022년 기준 108조 5,139억원, 2021년 수입(99조 8,499억원)대비 8조 6,640억원(8.7%) 증가
 - 2022년 정부순지원수입 규모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0.1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7.06%), 기타공공기관(15.48%), 준시장형 공기업(7.21%), 시장형 공기업(0.11%)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 정부순지원수입의 대부분(77.21%)을 차지하고, 자체사업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공기업은 비중이 7.32%로 매우 낮음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기업	시장형	925 (0.13)	539 (0.07)	1,715 (0.18)	2,610 (0.26)	1,144 (0.11)
	준시장형	37,839 (5.48)	53,410 (7.05)	58,930 (6.23)	75,431 (7.55)	78,218 (7.21)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276,483 (40.06)	290,338 (38.35)	369,919 (39.11)	383,130 (38.37)	402,116 (37.06)
	위탁집행형	268,854 (38.95)	289,964 (38.30)	341,757 (36.13)	373,969 (37.45)	435,639 (40.15)
기타공공기관		106,098 (15.37)	122,844 (16.23)	173,474 (18.34)	163,356 (16.36)	168,019 (15.48)
합계		690,201 (100)	757,098 (100)	945,797 (100)	998,499 (100)	1,085,139 (100)

주: 1.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2. 괄호 안은 해당 연도의 총계 중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의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전년 대비 0.54%p 증가
 - 2022년 총수입 중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7.2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11%), 기타공공기관(11.25%), 준시장형 공기업(7.42%), 시장형 공기업(0.06%)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 기 업	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925	539	1,715	2,610	1,144
		총수입(B)	1,625,351	1,568,476	1,499,052	1,688,409	2,032,527
		비중(A/B)	0.06	0.03	0.11	0.15	0.06
	준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37,839	53,410	58,930	75,431	78,218
		총수입(B)	764,314	775,332	800,514	884,118	1,054,100
		비중(A/B)	4.95	6.89	7.36	8.53	7.42
준 정 부 기 관	기금 관리형	정부순지원수입(A)	276,483	290,338	369,919	383,130	402,116
		총수입(B)	1,377,891	1,468,647	1,785,467	1,691,838	1,739,754
		비중(A/B)	20.07	19.77	20.72	22.65	23.11
	위탁 집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268,854	289,964	341,757	373,969	435,639
		총수입(B)	1,215,163	1,319,334	1,481,074	1,743,215	1,599,813
		비중(A/B)	22.12	21.98	23.07	21.45	27.23
기 타 공 공 기 관	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1,700	8,362	39,498	14,687	7,550
		총수입(B)	628,867	833,483	1,263,499	1,030,599	915,696
		비중(A/B)	0.27	1.00	3.13	1.43	0.82
	비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104,398	114,482	133,976	148,669	160,469
		총수입(B)	396,750	439,987	477,665	550,604	577,249
		비중(A/B)	26.31	26.02	28.05	27.00	27.80
	소계	정부순지원수입(A)	106,098	122,844	173,474	163,356	168,019
		총수입(B)	1,025,617	1,273,470	1,741,164	1,581,203	1,492,945
		비중(A/B)	10.34	9.65	9.96	10.33	11.25
합계		정부순지원수입(A)	690,201	757,098	945,797	998,499	1,085,139
		총수입(B)	6,008,336	6,405,259	7,307,269	7,588,782	7,919,138
		비중(A/B)	11.49	11.82	12.94	13.16	13.70

주: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공공기관 재무현황

-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기업은 외부 회계감사의 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0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결산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음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비교

절차		정부 결산	공공기관 결산
자체 결산서 작성 및 제출·승인	중앙관서의 장(기관장) →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2월 말	2월 말까지 제출, 3월까지 승인
결산서 감사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 감사원	4월 10일	5월 10일
회계검사 결과 기획재정부 송부	감사원 → 기획재정부장관	5월 20일	7월 31일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 국회	5월 31일	8월 20일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공공기관의 2022회계연도 자산총액은 1,054.5조원, 부채총액은 670조원, 당기순손실은 13.6조원으로 2021년 대비 총 자산은 88.4조원, 부채는 87.6조원, 당기순손실은 24.4조원 증가

-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일시적으로 158.6%까지 증가, 2020년, 2021년 감소하였으나 2022년 174.3%로 전년 대비 22.5%p 상승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2018~2022)¹⁾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자산	822.2	854.8	894.8	966.1	1,054.5	88.4
부채	500.7	524.2	540.6	582.4	670.0	87.6
(부채비율)	(155.7)	(158.6)	(152.6)	(151.8)	(174.3)	(22.5)
당기순이익	0.6	0.8	5.2	10.8	△13.6	△24.4

주: K-IFRS상 기본 재무제표인 자회사의 재무현황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보도자료, 2023.4.2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2년말 부채총액은 828.7조원으로 2021년 대비 83.7조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4.4조원으로 전기 당기순이익 4.2조원 대비 8.6조원 감소하였음

- 3개 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당기순손익은 전년도 대비 8.9조원 및 661억원 감소한데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3,548억원 증가하였음
-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HMM 등 관계기업의 손실로 인하여 2022년 지분법 손실 9.9조원을 인식함에 따라 2021년 대비 2022년 당기순손익이 8.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7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외된 것임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2020~2022)

(단위: 조원)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2020	2021 (a)	2022 (b)	증감 (b-a)	2020	2021 (c)	2022 (d)	증감 (d-c)
중소기업은행	336.5	370.5	402.9	32.4	1.55	2.43	2.78	0.35
한국산업은행	264.0	287.7	318.2	30.5	1.96	1.32	△7.62	△8.94
한국수출입은행	83.6	86.8	107.6	20.8	0.10	0.48	0.42	△0.06
합계	684.1	745.0	828.7	83.7	3.61	4.23	△4.42	△8.65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말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은 13.82%로 2021년 14.86% 대비 하락

-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BIS비율(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본비율) 평균은 2012년 13.00%에서 2015년 12.24%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15.29%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음
- ‘바젤 III 최종안’을 조기 도입함에 따라 2020년 이후 BIS비율 하락
 -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주요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 등을 하향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말, 한국수출입은행은 2021년 6월 말부터 도입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2020~2022)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소기업은행	12.37	12.30	12.39	12.51	13.13	14.2	14.5	14.47	14.82	14.85	14.68
한국산업은행	15.01	14.47	13.36	14.18	14.86	15.26	14.8	14.05	15.96	14.88	13.40
한국수출입은행	11.61	11.6	10.5	10.04	10.77	12.9	14.42	14.56	15.09	14.84	13.38
3개 은행 평균	13.00	12.79	12.08	12.24	12.92	14.12	14.57	14.36	15.29	14.86	13.82

자료: 금융감독원

■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부채 통계는 포괄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는 970.7조원(GDP대비 46.9%),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2조원(GDP대비 51.5%),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3조원(GDP대비 68.9%) 수준

- 국가채무(D1)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를 의미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
-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

국가부채 통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단위: 조원)

유형	2021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970.7 (46.9%)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066.2 (51.5%)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427.3조 (68.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2.12

■ 일반정부 부채(D2)는 20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5%)이며 2020년 945.1조원(GDP 대비 48.7%) 대비 121.1조원 증가

- 이 중 중앙정부에 속한 비영리공공기관(국립대학법인 포함)의 부채는 2020년 53.7조원(GDP 대비 2.8%)에서 2021년 54.3조원(GDP 대비 2.6%)으로 0.6조원 증가
- 일반정부 부채(D2) 산출 시 포함된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중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한 22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임

일반정부 부채(D2)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①+②+③)	945.1	48.7	1,066.2	51.5	121.1	2.8
중앙정부(①)	898.4	46.3	1,016.2	49.1	117.8	2.8
- 회계·기금	857.7	44.2	975.7	47.1	118.0	2.9
- 비영리공공기관	53.7	2.8	54.3	2.6	0.6	△0.2
- 내부거래	△13.0	△0.7	△13.9	△0.7	△0.9	0.0
지방정부(②)	63.0	3.2	69.9	3.4	6.9	0.2
- 회계·기금	63.2	3.3	68.9	3.3	5.7	0.0
- 비영리공공기관	1.0	0.0	2.9	0.1	2.0	0.1
- 내부거래	△1.2	△0.1	△2.0	△0.1	△0.8	0.0
내부거래(③)	△16.2	△0.8	△19.8	△1.0	△3.5	△0.2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2.12

- 2021년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부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무증권(회사채)은 22.6조원으로 2020년 대비 1.5조원 감소하였으나, 차입금은 12조원으로 2020년 대비 0.6조원 증가, 기타 미지급부채는 19.7조원으로 2020년 대비 1.4조원 증가
 - 2021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 중 채무증권은 주로 한국장학재단(10.3조원), 예금보험공사(7.5조원) 등에서 크게 나타나며, 차입금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7.7조원) 등 기관에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정부 부채(D2) 중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세부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2021년 기관별 부채금액
채무증권	24.1	22.6	△1.5	한국장학재단(10.3), 예금보험공사(7.5), 한국자산관리공사(3.3) 등
차입금	11.4	12.0	0.6	한국농어촌공사(7.7),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 등
기타 미지급	18.3	19.7	1.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9), 한국농어촌공사(2.2), 서민금융진흥원(2.1), 국민건강보험공단(2.0) 등
합계	53.7	54.3	0.6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2.12

- 공공부문 부채(D3)는 20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9%)이며 2020년 1,280.0조원(GDP 대비 66.0%) 대비 147.4조원 증가
 - 중앙 비금융공기업(KBS, EBS, 인천대 포함)의 부채는 2020년 369.7조원(GDP 대비 19.0%)에서 2021년 403.6조원(GDP 대비 19.5%)으로 33.9조원 증가

공공부문 부채(D3)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①+②+③)	1,280.0	66.0	1,427.3	68.9	147.4	2.9
일반정부(①)	945.1	48.7	1,066.2	51.5	121.1	2.8
비금융공기업(②)	408.1	21.0	439.7	21.2	31.6	0.2
- 중앙 비금융공기업	369.7	19.0	403.6	19.5	33.9	0.5
- 지방 비금융공기업	46.2	2.4	46.1	2.2	△0.1	△0.2
- 내부거래	△7.8	△0.4	△9.9	△0.5	△2.2	△0.1
내부거래(③)	△73.3	△3.8	△78.6	△3.8	△5.4	0.0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2.12

- 중앙 비금융공기업이 보유한 부채를 부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채무증권(회사채)은 2021년 221.4조원으로 2020년 대비 16.3조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 차입금은 66.7조원으로 2020년 대비 10.2조원 증가, 기타 미지급부채는 2020년 108.1조원에서 2021년 115.5조원으로 7.4조원 증가
- 2021년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주로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채무증권 73.4조원, 차입금 4.1조원, 기타 미지급 36.2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채무증권 32.7조원, 차입금 42.4조원, 기타 미지급 48.5조원), 한국가스공사(채무증권 10.2조원, 차입금 10.1조원) 등 기관에서 크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부문 부채(D3) 중 비금융공기업(중앙) 부채 세부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2021년 기관별 부채금액
채무증권	205.1	221.4	16.3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73.4), 한국토지주택공사(32.7), 한국도로공사(29.9), 국가철도공단(19.4), 한국가스공사(18.2) 등
차입금	56.5	66.7	10.2	한국토지주택공사(42.4), 한국가스공사(10.1),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4.1) 등
기타 미지급	108.1	115.5	7.4	한국토지주택공사(48.5),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36.2) 등
합계	369.7	403.6	33.9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2.12

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음
 -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공기업 I, 공기업 II),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이며, 준정부기관 중 일부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형'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조정
 -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됨
 - 2022년 경영실적평가는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반적 지표개편이 이루어짐

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을 평가함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p.21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탁월(S) 없음,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 보통(C) 45개(34.65%),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
 -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은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
 -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 2021년 7개(상승 3, 하락4) → 2022년 26개(상승12, 하락14)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2018~2022)

(단위: 개)

구분	연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공기업	2018	35	0	6	15	9	4	1
	2019	36	0	6	14	13	3	0
	2020	36	0	6	16	10	3	1
	2021	36	1	8	9	13	4	1
	2022	36	0	5	13	12	5	1
준정부기관	2018	50	0	9	17	18	6	0
	2019	50	0	10	21	12	6	1
	2020	54	0	11	18	18	6	1
	2021	57	0	10	22	17	6	2
	2022	57	0	7	23	21	4	2
중소형기관	2018	43	0	5	19	13	6	0
	2019	43	0	5	16	15	7	0
	2020	41	0	6	15	12	8	0
	2021	37	0	5	17	10	5	0
	2022	37	0	7	12	12	5	1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 2022년 평가대상 36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은 5개, 양호(B) 등급은 13개, 보통(C) 등급은 12개, 미흡(D) 등급은 5개, 아주미흡(E) 등급은 1개 기관

2022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기업

등급 (개수)	공기업명
탁월(S) (0)	-
우수(A) (5)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해양환경공단
양호(B) (1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PS(주)
보통(C) (12)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미흡(D) (5)	인천항만공사,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주 미흡(E) (1)	한국철도공사

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022.6.20.)를 재구성하여 재작성

- 2022년도 평가대상 94개 준정부기관-중소형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14개, 양호(B) 등급은 35개, 보통(C) 등급은 33개, 미흡(D) 등급은 9개, 아주미흡(E)은 3개

2022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 중소형

등급 (개수)	준정부기관	중소형
탁월(S) (0)	-	-
우수(A) (14)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양호(B) (3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보통(C) (33)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미흡(D) (9)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독립기념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아주 미흡(E)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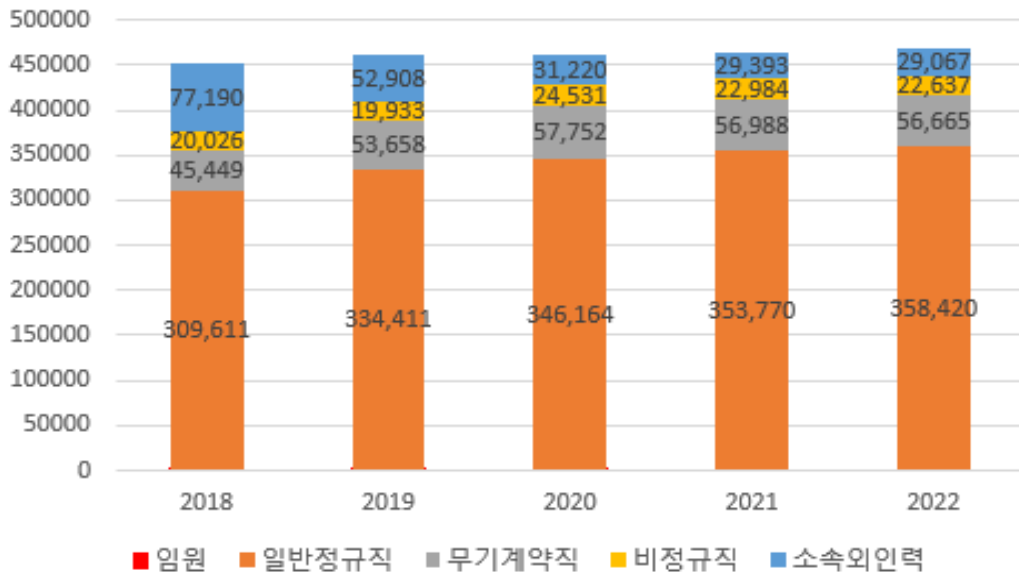
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022.6.20.)를 재구성하여 재작성

마. 공공기관 인력 현황

- 2022년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과 소속외인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인력(현원기준)은 46만 7,585명
 -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2021년 대비 3,635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규직이 전년 대비 4,308명 증가, 비정규직은 347명 감소, 소속외인력은 326명 감소
 -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정규직 비중은 201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단위: 명,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 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총 인력 규모(현원, 2018~2022)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정 규 직	임원	772	792	820	815	796	△19
	일반정규직	309,611	334,411	346,164	353,770	358,420	4,650
	무기계약직	45,449	53,658	57,752	56,988	56,665	△323
	소계	355,832	388,861	404,736	411,573	415,881	4,308
비정규직		20,026	19,933	24,531	22,984	22,637	△347
소속외인력		77,190	52,908	31,220	29,393	29,067	△326
합계		453,048	461,702	460,487	463,950	467,585	3,635

주: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소속외인력(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의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은 44만 5,144명, 현원은 41만 5,881명

- 2022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6,481명(1.4%) 증가, 현원은 전년 대비 4,308명(1.05%) 증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공기업	139,503	146,589	149,590	149,937	150,955	1,018
시장형	63,069	64,752	65,736	66,436	67,003	567
준시장형	76,434	81,837	83,854	83,501	83,952	451
준정부기관	105,198	111,034	113,333	116,432	118,253	1,821
기금관리형	27,865	28,920	29,320	30,187	30,735	548
위탁집행형	77,333	82,114	84,013	86,245	87,518	1,273
기타공공기관	134,676	158,252	167,908	172,294	175,936	3,642
은행형 공공기관	17,321	17,822	18,190	18,503	18,609	106
기타	117,355	140,430	149,718	153,791	157,327	3,536
전체	379,377	415,875	430,831	438,663	445,144	6,481

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은행형 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타 기관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공기업	133,417	140,800	143,928	144,161	145,045	884
시장형	60,645	62,899	64,207	64,661	65,177	516
준시장형	72,772	77,901	79,721	79,500	79,868	368
준정부기관	98,844	105,681	107,792	111,274	112,359	1,085
기금관리형	26,033	27,381	27,724	28,528	28,760	232
위탁집행형	72,811	78,300	80,068	82,746	83,599	853
기타공공기관	123,571	142,380	153,016	156,138	158,477	2,339
은행형 공공기관	16,243	16,577	16,866	16,962	16,912	△50
기타	107,328	125,803	136,150	139,176	141,565	2,389
전체	355,832	388,861	404,736	411,573	415,881	4,30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임직원 정규직의 2022년 정원은 44만 5,144명이었으나 현원은 2만 9,263명 미충원된 41만 5,881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정원에 비해 2만명 이상, 정원의 6% 이상 미충원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대비 현원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정원(C)	379,377	415,875	430,831	438,663	445,144	6,481
현원(D)	355,832	388,861	404,736	411,573	415,881	4,308
차이(C-D)	23,545	27,014	26,095	27,090	29,263	-
비율[(C-D)/C]	6.20	6.50	6.06	6.18	6.57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바. 공공기관 장애인 인력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비율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9,043명으로, 공기업이 4,930명, 준정부기관이 4,113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469명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장애인 근로자 수가 가장 높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8.20%로 가장 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총 654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7명 증가함

- 2022년 기준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임
 -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장애인 근로자는 1,035명이며, 전년 대비 61명 증가함
- 가장 적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6명), 국립생태원(7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9명) 순임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애인 근로자 현황(2018~2022)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3,955	4,258	4,637	4,710	4,930	220	5.66
시장형	1,831	1,913	2,019	2,048	2,154	106	4.15
준시장형	2,124	2,345	2,618	2,662	2,776	114	6.92
준정부기관	3,116	3,434	3,679	3,864	4,113	249	7.19
기금관리형	824	891	956	919	972	53	4.22
위탁집행형	2,292	2,543	2,723	2,945	3,141	196	8.20
전체	7,071	7,692	8,316	8,574	9,043	469	6.34

주: 각 연도 말의 장애인 근로자 현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27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총 37개 기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4개,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15개, 기금관리형은 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2개임

■ 전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2022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관의 부담금 액수 총액은 49억 3,100만원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5억 2,200만원,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7억 8,000만원, 기금관리형은 2억 5,100만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3억 7,800만원임
-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주)강원랜드 2억 3,300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 7,500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 1,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11억 1,000만원, 한국철도공사 4억 6,4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3억 4,600만원을 납부함
-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8,000만원, 근로복지공단 6,8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4,8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5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1,8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억 7,000만원을 납부하였음

2022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관수	총액	기관명 (금액)
공기업	19	3,302	
시장형	4	522	(주) 강원랜드(233), 한국전력공사(175), 한국공항공사(111) 등
준시장형	15	2,780	한국토지주택공사(1,110), 한국철도공사(464), 한국수자원공사(346) 등
준정부기관	18	1,629	
기금관리형	6	251	신용보증기금(80), 근로복지공단(68), 한국무역보험공사(48) 등
위탁집행형	12	1,378	한국국토정보공사(500), 한국전기안전공사(3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70) 등
전체	37	4,931	

자료: 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규직의 경우 2022년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은 584명으로, 전년 대비 41명 증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수가 2022년 246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67%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 장애인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이 연평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장애인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현황(2018~2022)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290	304	283	279	284	5	△0.52
시장형	114	157	124	126	101	△25	△2.98
준시장형	176	147	159	153	183	30	0.98
준정부기관	245	277	199	264	300	36	5.19
기금관리형	81	59	41	34	54	20	△9.64
위탁집행형	164	218	158	230	246	16	10.67
전체	535	581	482	543	584	41	2.22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29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청년인턴의 경우 전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2022년 장애인 신규채용 수는 1,518명으로, 전년 대비 23명 증가함

- 이러한 장애인 청년인턴형 신규채용 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5.16%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에 비해 준정부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청년인턴형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준정부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청년인턴형 신규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23.80%로, 공기업(5.52%)에 비해 컸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은 276명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8.26%이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은 673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18% 증가하였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장애인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현황(2018~2022)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a)	2022(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290	304	283	279	284	5	△0.52
시장형	114	157	124	126	101	△25	△2.98
준시장형	176	147	159	153	183	30	0.98
준정부기관	245	277	199	264	300	36	5.19
기금관리형	81	59	41	34	54	20	△9.64
위탁집행형	164	218	158	230	246	16	10.67
전체	535	581	482	543	584	41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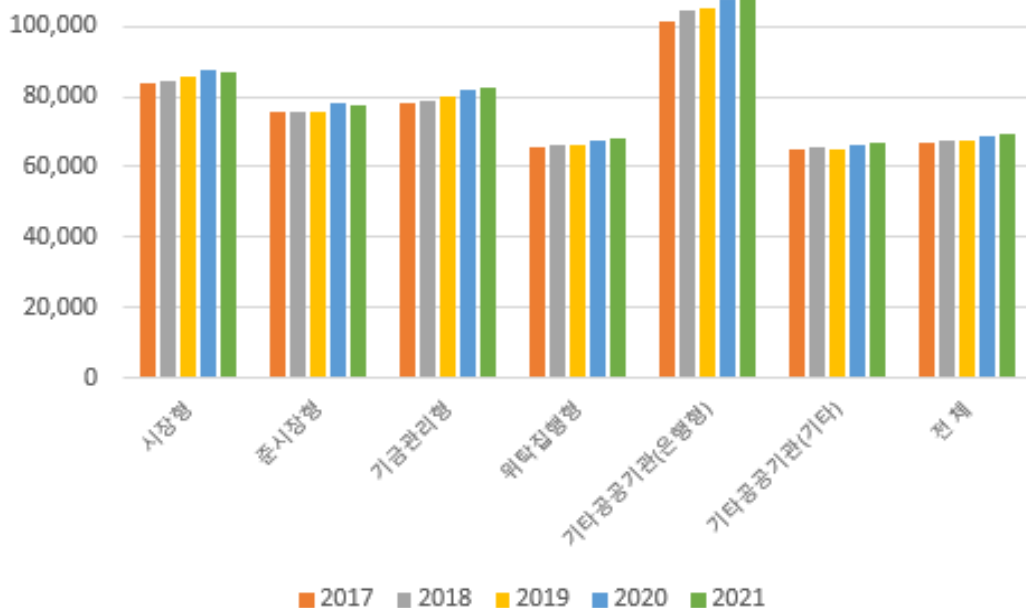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30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 2021년 공공기관(2023년 지정 기준) 일반정규직 평균보수는 약 6,922만원으로 2020년 6,856만원에 비해 약 66만원 증가
 -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시장형 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가장 높으며, 기타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낮음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서도 높음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현황(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현황(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 (B-A)
공기업	79,045	79,302	79,953	82,043	81,443	△600
시장형	83,517	84,378	85,771	87,314	86,895	△419
준시장형	75,814	75,637	75,752	78,236	77,712	△524
준정부기관	67,958	68,581	68,785	70,163	70,530	367
기금관리형	77,999	78,829	79,902	81,894	82,273	379
위탁집행형	65,608	66,182	66,183	67,417	67,781	364
기타공공기관	65,199	65,889	65,593	66,675	67,501	826
은행형 공공기관	101,117	104,643	105,353	107,879	108,885	1,006
기타	64,770	65,437	65,138	66,213	67,040	827
전체	66,917	67,528	67,374	68,560	69,219	65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21년 1억 7,989만원으로 2020년(1억 7,833) 대비 약 157만원 증가

-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이 매년 가장 높은 수준, 기타공공기관은 동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이 공공기관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
- 준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이 2021년 1억 9,261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46만원이 감소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 (B-A)
공기업	202,641	198,351	208,464	214,900	204,340	△10,560
시장형	208,334	215,114	230,930	231,280	221,485	△9,795
준시장형	198,530	186,245	192,239	203,070	192,609	△10,461
준정부기관	181,741	187,347	191,231	193,716	195,299	1,583
기금관리형	211,072	234,687	250,237	251,328	258,670	7,342
위탁집행형	174,408	175,512	176,480	179,313	179,456	143
기타공공기관	158,749	162,009	166,578	170,372	173,452	3,080
은행형 공공기관	333,413	381,300	392,412	397,105	419,330	22,225
기타	156,481	159,245	163,767	167,607	170,501	2,894
전체	166,953	169,716	174,622	178,325	179,893	1,56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이사(상임)의 평균연봉은 2021년 1억 5,15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만원 증가

- 2017~2021년 동안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1년 기준 2억 484만원,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2021년 기준 1억 4,768만원
- 기타공공기관의 2021년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1억 6,276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과 비슷한 수준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1년 기준 3억 1,42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음

공공기관 이사(상임)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 (B-A)
공기업	152,261	151,854	156,413	161,398	154,892	△6,506
시장형	156,944	161,398	171,969	172,803	166,936	△5,867
준시장형	148,879	144,962	145,178	153,161	146,651	△6,510
준정부기관	144,834	150,200	152,911	155,213	157,609	2,396
기금관리형	164,296	182,702	194,787	197,211	205,927	8,716
위탁집행형	138,717	139,985	140,116	142,728	143,244	516
기타공공기관	134,462	139,952	143,669	144,127	146,639	2,512
은행형 공공기관	256,123	285,228	293,190	296,789	308,937	12,148
기타	128,932	133,635	137,439	138,101	140,397	2,296
전체	141,509	145,592	149,090	150,884	151,550	66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1,611억원으로 2020년 (1,757억원) 대비 146억원 감소
 - 공기업의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995억원으로, 2021년 대비 73억원 증가
 - 시장형 공기업은 2021년 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561억원 증가한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2021년 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억원 감소
 - 준정부기관의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 감소
 - 기타공공기관의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원 감소
 -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출연액은 2021년 약 396억원으로 기타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81%를 차지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 (B-A)
공기업	2,644	1,702	1,111	922	995	73
시장형	2,354	958	170	216	777	561
준시장형	290	744	941	706	218	△488
준정부기관	86	112	181	165	130	△35
기금관리형	30	32	121	125	91	△34
위탁집행형	56	80	60	40	39	△1
기타공공기관	449	533	905	670	486	△184
은행형 공공기관	396	480	827	535	396	△139
기타	53	53	77	135	90	△45
전체	3,179	2,347	2,197	1,757	1,611	△14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0개 부처 34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6개, 준정부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타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2개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공기업(16)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1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6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1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준정부기관(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기타공공기관 (12)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5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주식회사	1
합계			34

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분류함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p.194~195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말 기준으로 정부출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38조 9,361억원)이며, 한국도로공사(35조 7,965억원), 한국산업은행(23조 1,516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8,539억원), 한국석유공사(10조 6,998억원)의 순임

정부출자액 상위 10개 공공기관

(단위: 억원)

순위	공공기관명	출자액	순위	공공기관명	출자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389,361	6	한국수자원공사	96,476
2	한국도로공사	357,965	7	한국수출입은행	87,878
3	한국산업은행	231,516	8	인천국제공항공사	37,006
4	한국철도공사	108,539	9	부산항만공사	28,790
5	한국석유공사	106,998	10	중소기업은행	23,722

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95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말 기준으로 정부 출자금은 총 166조 3,932억원이며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기관에 95조 2,88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기관에 13조 6,130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5개 기관에 7조 6,292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29조 4,401억원, 기획재정부 소관 3개 기관에 8조 8,944억원 등의 정부 출자금이 출자되었음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38조 9,361억원), 한국도로공사(35조 7,965억원), 한국철도공사(10조 8,539억원) 등에 대한 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10조 6,998억원)가,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중 부산항만공사(2조 8,790억원)가 정부출자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이 23조 1,516억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으며,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8조 7,878억원의 정부출자를 받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 4,918억원, 환경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가 9조 6,476억원의 정부출자를 받고 있음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국토교통부 (9)	1	한국토지주택공사	436,256	389,361	89.3
	2	한국도로공사	409,740	357,965	87.4
	3	한국철도공사	108,539	108,539	100.0
	4	인천국제공항공사	37,006	37,006	100.0
	5	한국공항공사	23,578	22,541	95.6
	6	주택도시보증공사	34,442	19,913	70.3
	7	한국부동산원	90	44	49.4
	8	새만금개발공사	14,970	14,970	100.0
	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4,436	2,550	57.5
	소 계		1,069,057	952,889	89.1
산업통상자원부 (7)	10	한국석유공사	106,998	106,998	100.0
	11	한국광해광업공단	20,488	20,461	99.9
	12	한국전력공사	32,098	5,842	18.2
	13	한국가스공사	4,616	1,207	26.2
	14	대한석탄공사	872	872	100.0
	15	한국지역난방공사	579	200	34.5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550	100.0
	소 계		166,201	136,130	81.9
해양수산부 (5)	17	부산항만공사	32,975	28,790	87.3
	18	인천항만공사	20,677	16,680	80.7
	19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11,053	71.2
	20	울산항만공사	4,405	3,846	87.3
	21	한국해양진흥공사	29,941	15,923	53.2
	소 계		103,521	76,292	73.7

주무부처 (기관 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금융위원회 (4)	22	한국산업은행	231,516	231,516	100.0
	23	중소기업은행	42,114	23,722	59.5
	24	한국주택금융공사	23,406	15,756	67.3
	25	한국자산관리공사	27,119	23,407	86.3
	소 계		324,155	294,401	90.8
기획재정부 (3)	26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27	한국수출입은행	127,733	87,878	68.8
	28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0
	소 계		128,799	88,944	69.1
농림축산식품부 (2)	29	한국농어촌공사	14,918	14,918	100.0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	683	100.0
	소 계		15,601	15,601	100.0
문화체육관광부(1)	31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환경부(1)	32	한국수자원공사	102,560	96,476	94.1
방송통신위원회(1)	3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0
국가보훈부(1)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100.0
전체 합계 (34)			1,913,238	1,663,932	87.0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등으로 인해 납입자본금 대비 정부출자금액 비율과 정부 지분율 간 일부 차이 발생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p.196~197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말 기준으로 3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 166조 3,932억원 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액이 117조 491억원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음
 - 은행형 공공기관, 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이 43조 7,948억원(26.3%)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 구성된 준정부기관에 대한 출자액이 5조 5,493억원으로 3.4%에 해당함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출자금액은 전년 대비 8조 7,348억원 증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액이 전년 대비 3조 4,077억원,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출자액이 1조 8,680억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액이 1조 2,650억원 증가함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출자 규모

(단위: 억원, %, %p)

유형별	납입자본금(a)			정부출자금액(b)			비중(b/a)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공기업	1,254,208	1,320,928 (69.0)	66,720	1,110,456	1,170,491 (70.3)	60,035	88.5	88.6	0.1
준정부 기관	53,011	67,000 (3.5)	13,989	42,704	55,493 (3.4)	12,789	80.6	82.8	2.2
기타 공공기관	510,461	525,310 (27.5)	14,849	423,424	437,948 (26.3)	14,524	82.9	83.4	0.5
합계	1,817,680	1,913,238 (100.0)	95,558	1,576,584	1,663,932 (100.0)	87,348	86.7	87.0	0.3

주: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공공기관 유형별 분류는 2023년 1월 30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름
 3. 괄호 안은 전체 금액 대비 공공기관 유형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98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18.2~100%로 다양하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곳은 13개, 50~99%를 출자하고 있는 곳은 17개, 50% 미만으로 출자하고 있는 곳은 4개 기관임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단위: 개)

정부지분율	공공기관명	개수
100%	한국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13
50~99%	한국광해광업공단(99.9%), 한국공항공사(95.6%), 한국수자원공사(94.1%), 한국토지주택공사(89.3%), 한국도로공사(87.4%), 부산항만공사(87.3%), 울산항만공사(87.3%), 한국자산관리공사(86.3%), 인천항만공사(80.7%), 여수광양항만공사(71.2%), 주택도시보증공사(70.3%), 한국수출입은행(68.8%), 한국주택금융공사(67.3%), 중소기업은행(59.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57.5%), 한국관광공사(55.2%), 한국해양진흥공사(53.2%),	17
50% 미만	한국부동산원(49.4%), 한국지역난방공사(34.5%), 한국가스공사(26.2%), 한국전력공사(18.2%)	4
합계		34

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199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차.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현황

-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 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부내역을 빠짐 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한 후 나머지 지출금액을 정부로부터 출연 혹은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및 주무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함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지정 해제 기준

구분	내용
지정 기준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출연·보조기관 중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기관
지정 해제 기준	① 자체수입이 현저히 낮거나 고유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기관 ② 출연·보조금 비중이 자체수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관 중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 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 요건 및 정부예산 지원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 경 대상 공공기관에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체수입 산정, 결산잉여금 처분, 인건비, 경상비 등의 편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서 작성 지침(요약)

구분	내용
공통사항	기관은 예산 요구서 작성 시 기관의 전체 수입,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지차 미대상 사업을 포함한 모든 수입, 지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수지차 보전 출연금은 사업출연금(350-02)으로 우선 편성하고, 사업비 초과액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편성함
자체수입	기관의 자체수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결산잉여금 등을 세부 내역까지 면밀하게 추계하여 수입항목에 반영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기관 보유 현금성 자산 등은 차년도 수입으로 반영
결산잉여금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차년도 수입(전기이월금)에 반영 결산잉여금 임의처분 기관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해당 금액만큼 수지차 보전액 감액 조정
인건비 및 경상비	경영혁신 기조를 유지, 조직 및 인력증가 최소화 산정기준에 따른 인건·경상비의 증가소요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내에서 반영하여 요구 인건비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기관별 필수 소요만 별도로 검토함

자료: 기획재정부, 「수지차보전기관 2023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2022

-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립공원공단 등 38개 출연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25개 보조기관을 포함하여 총 63개 기관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함
 - 수지차 보전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이라 함)에 따른 공공기관은 58개이며, 나머지 5개 기관은 비공공기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광해광업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각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7개, 기타공공기관 39개 등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총 58개 기관이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5개 기관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물기술인증원임

공공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수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소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	38	37	1	-	15	21	1
보조	25	21	-	1	2	18	4
합계	63	58	1	1	17	39	5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211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수지차 보전기관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8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 산하 기관 6개이며,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각각 5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처별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공공기관)

(단위: 개)

부처명	수지차 보전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8)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전당
환경부(6)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교육부(5)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5)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보건복지부(5)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부처명	수지차 보전기관명
고용노동부(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토교통부(4)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해양수산부(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정거래위원회(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국방부(1)	전쟁기념사업회
여성가족부(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보훈부(1)	독립기념관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농촌진흥청(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1)	한국임업진흥원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212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수지차 보전기관의 출연·보조 세부사업의 2023년도 총 예산은 3조 9,828억 8,700만원으로 2022년 예산 3조 7,649억 3,200만원 대비 2,179억 5,500만원 증가함
 - 2023년 출연예산은 전년 대비 2,261억 4,300만원 증가한 3조 1,619억 4,500만원이며, 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8,800만원 감소한 8,209억 4,200만원임

2023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관수	2021결산	2022예산(A)	2023예산(B)	증감(B-A)
출연	38	2,800,265	2,935,802	3,161,945	226,143
보조	25	794,432	829,130	820,942	△8,188
합계	63	3,594,697	3,764,932	3,982,887	217,955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215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3년도 출연·보조 예산이 가장 높게 편성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1조 14억 1,800만원(출연)이 편성되었으며, 수지차 보전기관 중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보조 예산 편성 상위 10개 기관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유형	2023 예산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001,4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보조	302,91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출연	278,661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224,083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88,613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55,099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134,934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출연	103,422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83,054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연	80,269

자료: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p.216 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카. 손실보전 공공기관 현황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기관을 말함
 - 공공기관 설립근거법에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것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익사업을 공공기관이 대행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2022년 12월 말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이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15개 기관임
 -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보전(보상)한다”라고 규정한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과 “정부가 보전(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적 손실보전 조항으로 나뉠 수 있음
 - 15개 기관 중, 법률에서 이익적립금을 초과하는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9개 기관임
 - 법률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두고 있는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6개 기관임

공공기관별 손실보전 관련 법률내용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45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제4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 제29조제3항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제12조제2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6조제2항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중점 주제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¹⁾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음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이 있으며, 동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됨

재무위험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9)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5)	자원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²⁾ 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34.1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
 - 자산매각 4.3조원, 사업조정 13.1조원, 경영효율화 5.4조원, 수익확대 1.2조원, 자본확충 10.1조원임
 - 수익성 악화기관은 5년 내 재무위험기관을 탈피하고,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임
 - 기획재정부는 「'23~'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재정건전화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에 신규 자구노력 8.1조원을 추가하여 42.2조원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³⁾

박소희 예산분석관 (02-6788-4683)

1)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기획재정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3.9.

나. 주요 쟁점

■ 재무위험기관 중 2022년 실제 부채 규모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2022년 부채 전망치를 초과한 기관이 14개 중 11개로 나타나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재정건전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11개 기관임
- 전체 재무위험기관의 2022년 부채 전망은 430조 8,007억원이었으나, 실제 부채 규모는 448조 8,026억원으로 나타나 전망치를 18조 19억원 초과함
- 특히 한국전력공사(별도)의 2022년 부채총액은 108조 9,630억원으로 전망치보다 9조 5,762억원 초과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부채가 52조 142억원으로 전망치 대비 6조 1,798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재무위험기관의 2022년 부채전망 및 실제 부채규모

(단위: 억원)

부처	구분	부채규모 전망(A)	실제 부채규모(B)	차이(B-A)
산업 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별도)	993,868	1,089,630	95,762
	한국남동발전(주)	75,052	82,661	7,609
	한국남부발전(주)	78,685	87,028	8,343
	한국동서발전(주)	59,286	59,088	△198
	한국서부발전(주)	79,350	81,927	2,577
	한국중부발전(주)	106,100	113,923	7,823
	한국수력원자력(주)	398,270	432,575	34,305
	한국가스공사	458,344	520,142	61,798
	한국석유공사	208,946	197,951	△10,995
	한국광해광업공단	71,293	74,494	3,201
	한국지역난방공사	56,301	58,111	1,810
	대한석탄공사	23,734	23,917	183
국토 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1,503,262	1,466,172	△37,090
	한국철도공사	195,516	200,405	4,889
합계		4,308,007	4,488,026	180,0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p.15을 바탕으로 재작성

■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4개 기관⁴⁾의 2022년 부채비율 실적치 또한 중장기재무 관리계획 상 2022년 전망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2022년 부채비율이 전망치를 초과하며, 동 기관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실적치 모두 전망치를 초과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별도) 및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각각 493.9% 및 499.6%으로 40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22년에 예측한 부채비율 전망치보다 각각 124.8%p 및 62.3%p 높음

재무위험기관의 2022년 부채비율 전망 및 실제 부채비율

(단위: %, %p)

부처	구분	전망(A)	실적치(B)	차이(B-A)
산업 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별도)	369.1	493.9	124.8
	한국가스공사	437.3	499.6	62.3
	한국지역난방공사	292.9	348.6	55.7
	한국수력원자력(주)	153.7	164.6	10.9
	한국동서발전(주)	119.2	90.4	△28.8
	한국남동발전(주)	162.0	126.0	△36.0
	한국남부발전(주)	184.6	147.6	△37.0
	한국중부발전(주)	240.1	198.6	△41.5
	한국서부발전(주)	214.9	149.7	△65.2
국토 교통부	한국철도공사	241.3	222.6	△18.7
	한국토지주택공사	221.0	218.7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p.16을 바탕으로 재작성

4)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제외함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2022.7.)
 -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2022년 기준 350개)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로 구성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방향

[추진방향]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기능) ①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 축소

②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 축소

③ 기간간 유사·중복 기능 →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

(조직·인력)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복리후생) 과도한 수준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자료: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 2022년 12월,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 기능조정 분야에서는 민간·지자체 경합,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7,231명 조정 계획
- 조직·인력 효율화 분야에서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 정·현원차가 있는 157개 기관에서 △5,132명 축소하되 필수 요소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 재배치로 △5,211명 인력감축 계획
- 예산 효율화 분야에서는 2023년 경상경비 예산을 2022년 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 10% 삭감하여 총 4,316억원 절감 계획
- 자산 효율화 분야에서는 124개 기관의 비핵심 부동산에 대해 총 11조, 6,000억원(330건) 규모의 자산 정비, 107개 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에 대해 7,000억원(189건) 규모의 정비, 69개 기관에서 비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2조 2,000억원 규모로 정비, 청사 효율화 (매각 56건, 유희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5건)를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 5,000억원(330건) 규모 자산 정비 계획
- 복리후생 효율화 분야에서는 282개 기관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에 대해 715건의 개선 계획 수립

나. 주요 쟁점

■ 기능 조정 중 일부는 공공기관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

- 기능 조정 분야는 ①민간 경합, ②지방자치단체 경합, ③비핵심 업무, ④수요감소 및 사업 종료, ⑤유사·중복 업무에 대한 기능조정을 의미
- 그러나 기능 조정의 일부는 공공기관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사례 발생
 - 수요감소 및 사업 종료로 인한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자체적 혁신 노력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사업을 종료시킴으로써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기관의 혁신 노력과 관계없이 완료되는 사업을 기능 조정으로 포함하거나, 법률 개정 또는 국제 협약에 따른 사업 종료를 기능 조정에 포함하는 등 사업 종료의 원인과 관계없이 종료되는 사업 전체를 혁신계획 상 기능 조정에 포함

공공기관 혁신계획 상 기능 조정으로 보기 미흡한 사례

구분	내용
완료된 사업을 기능조정으로 포함	사학연금공단(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종료) 인천항만공사(인천항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준설사업 종료 등)
법률 개정 또는 국제 협약에 따른 사업 종료를 기능조정으로 포함	환경보전협회(회원사 모집·관리 폐지 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물류비 지원 및 항공공동물류사업)

■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인력 재배치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

-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①기능조정, ②조직·인력 효율화, ③정·현원차 축소, ④인력 재배치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음
- 법률 제·개정을 전제한 인력 재배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정원을 추가 감축할 여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공공기관 혁신계획 상 인력 조정 방식: ‘총 감축인원 = 감축인원 - 인력 재배치’로 인력 재배치는 사실상 증원의 역할을 함
 - 일부 기관에서 인력 재배치를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하거나 실제 인력 증원 소요가 없음에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부적절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감축 규모가 줄어들음
- 특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인력의 한시정원이 종료됨에 따라 감축된 인원을 공공기관 혁신계획 상 인력감축에 포함하여 동 계획의 취지에 부합한 인력감축으로 보기 부적절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부적절한 정원 조정 사례

기관명	내용
주택관리공단	법률 개정을 전제로 103명의 인력 재배치
국토안전관리원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을 사유로 15명 인력 재배치
창업진흥원	한시정원 종료를 공공기관 혁신계획 상 인력 감축에 포함

- 기관별 정·현원차 현황과 이를 사유로 한 정원 감축 반영이 일관성이 없으며, 일부 기관은 정·현원차 축소에 따른 정원 조정을 무기직 위주로 시행

■ 자산효율화의 경우 실질 수입으로 볼 수 없거나 과거 미매각 자산 등을 포함하여 자산효율화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음

- 자산효율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기타 자산,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매각 등 총 794건 14.5조원규모의 자산 정비

연도별 자산효율화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2027	합계
비핵심 부동산	11,151	39,895	37,050	27,299	115,394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586	3,733	828	2,081	7,227
출자회사 지분	704	11,797	2,862	7,136	22,498
합계	12,440	55,425	40,739	36,516	145,12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1.11.)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금액 14.5원 중 64.3%는 실질 수입으로 볼 수 없거나 과거 매각추진과정에서 이행되지 못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자산효율화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는 상황
 - 공공기관의 실질적 수입으로 볼 수 없는 금액에 대한 자산도 자산효율화 금액에 포함
 - 공공기관의 숙소용도 임차주택을 사택용도로 단순변경하여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실제 회수 보증금이 아닌 자산이거나 임차만료 후 재임차를 통해 지출될 주택의 보증금 등을 동 혁신계획의 수입금으로 계상
 -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전부터 매각 시도를 계획하였으나 매각이 원활치 못했던 자산을 동 혁신계획에 포함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매각 시도를 하였으나 유찰, 규제요건, 법적 분쟁 등으로 매각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이번 혁신계획에 포함
 - 매각 시기 및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자산을 혁신계획에 포함

-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부지(63,146억원)의 경우 2006년에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하였다 실패하였으며, 2021년에 다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매각을 계획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시 간의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이견으로 인하여 2023년~2024년에 매각하기로 계획한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시기 및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실질 수입으로 볼 수 없거나 혁신계획 이전에 매각을 계획했던 자산 등의 매각 금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금액	비고
혁신계획 이전에 매각을 시도했던 자산의 매각액	25,6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청사 등
혁신계획 이전에 매각을 계획했던 자산의 매각액	3,273	한국전력공사 의정부변전소 부지 등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자산의 매각액	63,146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실질 수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매각액	1,286	숙소용도 → 사택용도 전환 등
소계(A)	93,361	
전체 공공기관 자산 매각액(B)	145,120	
비중(A/B)	64.3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자회사 이익률 및 배당률 관리 통한 적정 공공요금 부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 공공요금 산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총괄원가는 공공요금을 통하여 회수됨
 -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은 전기요금 86.3%(2021년 결산기준), 천연가스 도매요금 81.6%, 광역상수도 요금 79.9%, 철도요금 88.1%, 도로요금 81.7%(이상 2022년도 결산기준) 등으로 나타남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방법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 영업비용 합계 - 지급이자 + 영업외비용 + 관련 법인세 비용 - 영업외수익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세후타인자본보수율과 자기자본보수율 가중평균치)

자료: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이용하여 재작성

나. 주요 쟁점

나-1.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구입전력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자회사는 전력그룹사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회사 등
-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3사(한전MCS, 한전FMS, 한전CSC)는 공사가 100%의 지분율을 가짐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책에 따라 2019년 설립
 - 한전MCS는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업무 수행, 한전FMS는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업무, 한전CSC는 전기이용자의 상담서비스 제공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회사

(단위: %)

회사명	한전 지분율	설립연도	설립 목적
한전MCS	100.00	2019.3.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업무 수행
한전FMS	100.00	2019.3.	한국전력공사 시설의 청소, 시설관리 및 경비 업무 등
한전CSC	100.00	2019.12.	한국전력공사 전기 이용자의 상담서비스 제공

자료: 각 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와의 거래 시 계약금액이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되어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출자회사의 매출과 손익 및 이익잉여금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비중이 크며, 해당 거래로 인해 지속적 당기순이익 발생 및 이익잉여금을 시현하고 있음

출자회사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2018~2022)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한국전력 기술	당기순이익	129	264	202	165	180	940
	이익잉여금	4,511	4,597	4,834	5,165	5,465	-
한전KPS	당기순이익	1,608	1,577	859	981	979	6,004
	이익잉여금	9,703	10,536	10,407	11,005	12,021	-
한전원자력 연료	당기순이익	158	246	145	258	315	1,122
	이익잉여금	2,898	3,087	3,151	3,385	3,661	-
한전KDN	당기순이익	600	422	452	672	426	2,572
	이익잉여금	3,243	3,616	3,903	4,493	4,851	-
한전MCS	당기순이익	-	34	192	190	85	501
	이익잉여금	-	34	215	402	611	-
한전FMS	당기순이익	-	2	8	2	22	34
	이익잉여금	-	2	13	11	47	-
한전CSC	당기순이익	-	-	25	△21	△21	△17
	이익잉여금	-	-	25	5	9	-

자료: 각 회사 제출자료 및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규제서비스 포함분만큼 총괄원가가 상승함

-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영업손익을 구성, 영업손익 중 규제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사업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포함
- 출자회사와의 거래방식은 한전이 출자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당기순이익 발생시 배당받는 구조임
 -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 기준 상 배당금은 총괄원가를 하락시키는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아, 한전이 수령한 배당금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규제사업의 이익으로 계상됨

나-2.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요금 서비스인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①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②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산정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의 100%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한국도로공사가 지불하는 관련 용역비용은 총괄원가 중 적정원가에 포함되어 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침
- 한국도로공사 100%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의 적정 계약체결을 통해 과다 내부유보를 지양함으로써 총괄원가를 낮출 필요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설립연도인 201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익시현, 2022년 말 기준 337.65억원을 내부에 유보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연도별 손익, 이익잉여금 및 여유자금 추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자회사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019.5.9. 설립)	매출액	152,336	310,822	328,182	346,705
	영업이익	3,158	11,220	14,559	2,943
	당기순이익	2,398	8,059	16,167	7,140
	매출액순이익률	1.6	2.6	4.9	2.1
	이익잉여금	2,398	10,458	26,625	33,765
	여유자금 추정액	△1,492	5,832	15,363	20,962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총괄원가)를 상승시킴
 -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적정원가를 구성
 -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업무에 비용을 과다 지불하면 적정원가와 총괄원가를 상승시켜 공공요금 증가로 이어짐

- 적정 수준의 용역계약 체결 시 사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모회사가 공공요금으로 회수하는 총괄원가를 낮출 수 있어 용역계약의 주요 단계별(용역원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나-3. 한국가스공사

■ 가스요금은 천연가스 제공 시 소요된 취득원가(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

- 총괄원가 중 원료비를 제외한 공급비용은 ①적정원가와 ②적정투자보수로 구분
-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액’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하는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LNG 도입계약 체결과 함께 LNG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이루어질 시 이 지분투자를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규제서비스)로 봄(「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 요금기저에 가산 반영된 해외지분투자액은 가스요금의 증가 효과를 가져오며, 동 지분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수령액은 적정원가(영업외수익)에서 차감 반영되어 가스요금의 감소 효과를 가져옴

가스 도매 요금 체계

구분		세부내역
가스요금 총괄원가		원료비(재료비) + 공급비용
공급비용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규제서비스 관련 영업비용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지급이자 제외) + 법인세비용
	적정투자보수	가스생산설비 투자액에 대한 기회비용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자료: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금액을 가스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공공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원가 및 관련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적정투자보수는 규제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직접 공여하고 있는 ‘요금기저’에 대한 적정보수를 의미하며,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액은 LNG 도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원가가 아니므로 이를 요금기저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철도, 도로, 전력 등 요금(운임)기저에 반영되는 자산에는 지분투자액이 없음
- 해외지분투자금액을 총괄원가에 반영함으로써 투자의 의사결정주체와 위험부담주체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스 이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임

타 요금과의 요금(운임)기저 관련 규정 비교

구분	관련규정	요금(운임)기저 반영 자산
철도	철도운임 산정기준	순가동설비자산액, 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
도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순가동설비자산액과 무형자산액
전력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하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
가스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순가동설비자산액과 무형자산액, 일정분의 운전자금, 지분투자금액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

■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시 지분투자는 총괄원가 상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채권투자는 요금기저에 포함하지 않음

-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시 해외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지분투자(출자)와 채권투자(대여)로 나누어지는데, 지분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채권투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음
- 규제서비스로 분류되어 가스요금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지분투자(출자)방식은 채권투자(대여) 방식에 비해 투자회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한 회수 위험을 요금에 전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 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방식에 따라 총괄원가 반영이 달라져 일관성이 떨어짐

해외지분투자(규제사업) 관련 총 투자(출자 및 대여) 및 회수누적액(~2022년)

(단위: 억원)

구분	지분투자(규제)			채권투자(비규제)		
	출자액	감자	배당	대여액	이자수익	원금회수액
오만LNG	25	25	3,406	0	0	0
카타르 RasGas	195	0	15,465	0	0	0
예맨YLNG	194	0	494	2,012	82	1,529
인니DSLNG	4,224	3,291	96	0	0	0
호주GLNG	21,668	0	0	22,298	5,460	3,982
호주Prelude	12,024	0	0	9,055	3,577	886
합계	38,350	3,316	19,461	33,365	9,119	6,397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은 공기업으로,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상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1.1.)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 (정원) 50명 → 300명, (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 10억원 → 30억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일부가 정원 기준 (300명 이상)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 준정부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이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2023 공공기관 지정 변동 현황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유형변경 (43)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지정 변경 (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지정 변경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변경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37개	지정 변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신규	특허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기타공공기관
해제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지정 해제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지정 해제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2호(2023.6.)

나. 주요 쟁점

- 상향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300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원 기준이 50명 → 300명으로 상향
 -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변경된 43개 공공기관의 경우 모두 정원 기준(300명 이상) 미달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
- 기획재정부는 舊 「중소기업기본법」¹⁾에 따른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②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감안하여 300명으로 상향하였다는 입장
 -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 (200명 미만) 전기·가스·수도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00명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② 준정부기관은 현재 300명 이상과 300명 미만(중소형)을 구분하여 별도로 경영평가 중

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등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공사의 경우 「항만공사법」 및 「항만법」 등에 따라 소관 항만구역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 및 관리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음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22년 기준 수입이 1조를 상회하고 자산도 약 7조 4,840억원으로, 정원 기준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을 크게 상회함

2022년 기준 4개 항만공사의 정원, 수입액, 자산 현황

기관명	정원(명)	수입액(백만원)	자산(백만원)
부산항만공사	279	1,011,645	7,483,913
인천항만공사	289	537,727	3,534,789
여수광양항만공사	177	279,586	1,814,151
울산항만공사	130	198,894	881,75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므로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정원 기준을 200명으로 적용하여야 함.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
- 또한, 舊 「중소기업기본법」 상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등 정원 기준과 자산, 자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2년 기준 수입액이 12조 5,161억원, 자산이 24조 6,341억원으로, 수입액과 자산 기준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을 상회함

2022년 기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정원, 수입액, 자산 현황

기관명	정원(명)	수입액(백만원)	자산(백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49	12,516,125	24,634,17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의 주체가 다르고, 경영평가 외 임원 임명절차나 재무 협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② 중소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것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나 임원 임명절차, 재무 협의 등에서 차이 존재
 - : (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
기타공공기관 -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 실시
 - (임원)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임명 절차 적용,
기타공공기관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 (재무)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제외
 - 중소형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영평가나 임원 임명절차, 재무 협의 등에서 차이 발생
- 따라서 상향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300명)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함¹⁾
 -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납부
-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6%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는 민간사업주를 제외한 타 기관과 동일한 수준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기준 2018년 3.2%, 2019~2021년 3.4%, 2022년 이후 3.6%임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단위로 측정하는데, 월에 의무 고용해야 하는 인원에 미달되면 미달되는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액을 산정함

사업주별 장애인고용 의무고용률

(단위: %)

기준(적용)연도	2022	2023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1	3.1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3.6	3.6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박지민 예산분석관 (02-6788-373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2조제2항제28호

■ 202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27억원이며, 공공기관 중 180개가 납부하였음

- 고용부담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0~2021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감소하였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수는 2019년 이후로 감소 추세임

공공기관 유형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납부액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기업	납부액	1,460	2,202	4,740	4,702	3,463
	공공기관 수	19	22	18	17	19
준정부기관	납부액	1,335	1,932	3,376	3,319	1,452
	공공기관 수	35	35	31	24	18
기타공공기관	납부액	13,889	16,097	21,111	21,393	17,790
	공공기관 수	135	142	137	145	143
합계	납부액	16,684	20,231	29,227	29,414	22,705
	공공기관 수	189	199	186	186	18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2018~2022) 납부누적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5년 간 130억 9,000만원을 납부액으로 납부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2018년 4억 9,000만원의 납부액이 2022년의 경우 10억 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년 대비 급격한 납부액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기타공공기관이 8개로 가장 많으며, 교육부 담당 기관은 3개로 모두 병원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단위: 백만원)

순 위	공공기관	유형	부처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합계
1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2,569	2,712	2,529	2,477	2,803	13,090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758	927	1,018	994	621	4,318
3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736	976	925	781	789	4,207
4	한국원자력의학원		과기부	774	915	854	689	882	4,114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기부	490	685	834	897	1,008	3,914
6	한국산업은행		금융위	572	866	870	591	720	3,619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국토부	249	772	531	742	1,110	3,404
8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산자부	375	844	1,117	772	175	3,283
9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교육부	327	527	976	565	515	2,910
10	중소기업은행		금융위	875	988	630	27	284	2,804
소계	전체 공공기관			16,684	20,231	29,227	29,414	22,705	118,26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 내 장애인 부담금을 1억원 이상 지급한 공공기관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개로 가장 많음

- 산업통상자원부 10개, 교육부 9개, 국토교통부 4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각각 2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구원 혹은 평가원에서 장애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부담금 납부 사례는 모두 대학병원이며 부담금 액수가 타 부처에 비해 평균적으로 큼

부처별 공공기관 장애인부담금 지급액(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주무부처	유형	2022년 부담금 납부기관 (액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1,008)	한국항공우주연구원(224)
		한국원자력의학원(88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22)
		기초과학연구원(491)	한국과학기술연구원(2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338)	한국재료연구원(196)
		한국원자력연구원(3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84)
		한국화학연구원(311)	한국식품연구원(140)
		한국전기연구원(3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33)
		(재)우체국시설관리단(235)	한국지질자원연구원(131)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주)강원랜드(233)	한국전력공사(175)
	준시장형	한국전력기술(주) (218)	대한석탄공사(163)
		한전KPS(주) (187)	(주)한국가스기술공사(115)
	위탁집행형	한국전기안전공사(318)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 (2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2)
		한전MCS(주) (208)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2,803)	부산대학교병원(303)
		경북대학교병원(789)	전북대학교병원(301)
		전남대학교병원(756)	강원대학교병원(179)
		충남대학교병원(515)	경상국립대학교병원(153)
국토교통부	시장형	한국공항공사(111)	
	준시장형	한국토지주택공사(1,110)	한국철도공사(464)
	위탁집행형	한국국토정보공사(500)	

주무부처	유형	2022년 부담금 납부기관 (액수)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720)	중소기업은행(284)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176)	대한적십자사(107)
방위사업청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621)	국방기술품질원(459)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193)	
국가보훈부	위탁집행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46)	
해양수산부	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691)	
법무부	기타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03)	
환경부	준시장형	한국수자원공사(346)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10)	

주: 1억원 미만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 해당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 환경법규 위반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의 환경(E) 부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수시 공시 사항임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대분류	중분류	항목	기준	갱신주기
II.ESG	E(환경)	18 환경보호	- 환경법규 위반 현황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총 29건
 -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환경법규 위반건수는 총 29건이며, 최근 5년간 누적된 위반 건수는 233건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이 9건, 준시장형 공기업이 11건으로 공기업의 위반 건수가 총 20건이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9건 모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위반 건수였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간 누적
공기업	40	43	30	50	20	183
시장형	28	27	11	28	9	103
준시장형	12	16	19	22	11	80
준정부기관	17	8	8	8	9	50
기금관리형	0	0	1	0	0	1
위탁집행형	17	8	7	8	9	49
전체	57	51	38	58	29	233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2년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기관과 건수는 다음과 같음

- 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
-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환경법규 위반 발생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위반건수)
시장형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3건), 한국중부발전(2건), 한국서부발전(2건), 한국수력원자력(1건), 한국전력공사(1건)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8건), 한국조폐공사(3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8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건)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사항 최다 발생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총 57건으로, 전체 공기업·준정부 기관 중 최다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중부발전(17건), 한국전력공사(15건), 한국서부발전(14건) 순으로 많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57건), 한국도로공사(9건) 순으로 많았음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43건)이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 환경법규 위반 주요 발생 기관(최근 5년간 누적)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간 누적
한국중부발전	시장형 공기업	3	7	2	3	2	17
한국전력공사		3	1	3	7	1	15
한국서부발전		2	8	0	2	2	14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	10	14	17	8	57
한국도로공사		1	5	1	2	0	9
국가철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6	8	5	6	8	43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주요 공공기관²⁾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1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평균 구매비율은 1.40%임
 - 주요 공공기관 101개 중 81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20개 기관은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주요 공공기관(101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현황(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 달성 및 미달성 기관 현황(2022년 기준)

구분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달성 기관 (81개)	축산물품질평가원(6.27%), 우체국물류지원단(6.10%), 한국무역보험공사(5.84%), 그랜드코리아레저(4.66%) 한국국제협력단(4.38%), 한국장학재단(4.22%), 국민체육진흥공단(3.53%), 한국장애인고용공단(3.38%) 한국철도공사(3.29%), 신용보증기금(3.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3.24%), 한국가스안전공사(3.18%) 중소기업은행(3.16%), 우체국금융개발원(3.04%), 한국중부발전(2.90%), 부산항만공사(2.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45%), 한국산업인력공단(2.36%) 한국전력거래소(2.26%), 국립생태원(2.24%), 한국마사회(2.19%), 한국주택금융공사(2.16%) 한국농어촌공사(2.12%), 근로복지공단(2.08%),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6%), 인천항만공사(1.97%) 한국고용정보원(1.96%), 한국남동발전(1.94%), 한국환경공단(1.91%), 한국공항공사(1.8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83%), 국토안전관리원(1.78%), 한국전기안전공사(1.77%) 한전KDN(1.77%), 한국동서발전(1.74%), 국민연금공단(1.73%), 울산항만공사(1.7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1.61%), 한국남부발전(1.6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60%), 한국석유관리원(1.60%), 한국소비자원(1.60%), 한국수자원공사(1.57%)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55%), 한국산업단지공단(1.53%) 국가철도공단(1.50%), 한국수력원자력(1.48%), (주)강원랜드(1.48%), 한국교통안전공단(1.47%) 한국언론진흥재단(1.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40%) 한국연구재단(1.38%), 한국토지주택공사(1.38%), 국민건강보험공단(1.38%), 한국국토정보공사(1.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1.35%), 도로교통공단(1.32%), 한전KPS(1.32%), 한국에너지공단(1.31%) 인천국제공항공사(1.31%), 한국광해광업공단(1.30%), 한국서부발전(1.29%), 한국원자력환경공단(1.24%) 한국가스기술공사(1.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17%), 여수광양항만공사(1.14%) 한국도로공사(1.09%), 한국관광공사(1.08%), 주택도시보증공사(1.0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6%), 에스알(1.06%) 공무원연금공단(1.06%), 한국부동산원(1.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1.05%), 기술보증기금(1.00%)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 (20개)	한국전력공사(0.97%), 한국인터넷진흥원(0.94%), 국립공원공단(0.91%), 한국가스공사(0.89%) 한국수출입은행(0.84%), 한국사학진흥재단(0.8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0.82%) 해양환경공단(0.77%),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0.75%), 영화진흥위원회(0.61%) 한국자산관리공사(0.39%), 한국전력기술(0.37%), 한국조폐공사(0.34%), 한국지역난방공사(0.30%) 예금보험공사(0.25%), 한국산업은행(0.17%), 대한석탄공사(0.16%), 한국석유공사(0.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0.07%), 한국국제교류재단(0.04%)

주: ()안의 숫자는 각 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주요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20개 기관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 현황(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국제교류재단	15,559	6	0.0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03,133	353	0.07
한국석유공사	88,590	106	0.12
대한석탄공사	62,263	98	0.16
한국산업은행	152,511	256	0.17
예금보험공사	34,916	86	0.25
한국지역난방공사	211,041	643	0.30
한국조폐공사	99,097	333	0.34
한국전력기술(주)	102,410	374	0.37
한국자산관리공사	29,754	116	0.39
영화진흥위원회	7,854	48	0.6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134	16	0.75
해양환경공단	77,572	601	0.77
한국사학진흥재단	3,474	29	0.8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26,334	1,847	0.82
한국수출입은행	65,078	549	0.84
한국가스공사	330,645	2,957	0.89
국립공원공단	92,670	847	0.91
한국인터넷진흥원	95,941	903	0.94
한국전력공사	1,551,441	15,055	0.9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은행임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관 전체 구매액 155억 5,900만원 중 6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4%에 불과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관 전체 구매액 5,031억 3,300만원 중 3억 5,3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07%에 불과
 - 한국석유공사는 기관 전체 구매액 885억 9,000만원 중 1억 6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12%에 불과
 - 대한석탄공사는 기관 전체 구매액 622억 6,300만원 중 9,8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16%에 불과
 - 한국산업은행은 기관 전체 구매액 1,525억 1,100만원 중 2억 5,600만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여 구매비율은 0.17%에 불과

가. 현황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²⁾의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28개의 기관이 A~D 등급³⁾ 중 A등급을 받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1개의 기관이 B등급, 국토안전관리원 등 14개의 기관이 C등급, (주)강원랜드 등 6개의 기관이 D등급을 받음
-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12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3) 만족도 결과에 대한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 등급, 80점 이상은 C 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 부여

주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22년 기준)

평가등급	공공기관
A (28개)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환경공단
B (41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
C (14개)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에스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D (6개)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제외 ¹⁾ (12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KPS

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12개 기관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은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임
- 상기 6개 기관의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3년 내내 대부분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는 등 만족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주)강원랜드 등 6개 기관에 대한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0	2021	2022
(주)강원랜드	D	D	D
한국토지주택공사	D	D	D
주택도시보증공사	C	D	D
한국마사회	- ¹⁾	C	D
한국석유공사	C	C	D
한국전력공사	C	C	D

주: 1) 한국마사회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미 실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강원랜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C등급)을 제외한 2021년 및 2022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 한국마사회의 최근 2년간 고객만족도 결과는 C(21년), D(22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
-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결과는 C(20년), C(21년), D(22년)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

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및 규모 현황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주 대상으로 주택자금 저리 제공 금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복리후생 제공 원칙적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도록 휴가·휴직제도, 퇴직금 제도 및 기타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음

공공기관 복리후생 관련 지침의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지침명	적용 대상 기관	복리후생 관련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일부 내용은 기타공공기관도 준용)	복리후생비 개념,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 금지, 주택자금 저리 제공 금지, 보육료 중복 지원 금지, 기념품 낭비 방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복리후생 제공 원칙적 금지 등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전체 공공기관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는 휴가·휴직제도, 퇴직금 제도 및 기타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 규정

- 202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8,675억원으로, 2018년 대비 380억원(4.58%) 증가하였음
 - 예산상 복리후생비 지출 규모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복리후생비의 증가율은 기타공공기관(23.9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96%) 등으로 높았음

공공기관 연도별 예산상 복리후생비 현황(2018~2022)

(단위: 억원, %)

구분		2018(A)	2019	2020	2021	2022(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공기업	시장형	2,159	2,143	2,040	1,910	1,933	△226	△10.47
	준시장형	1,867	1,753	1,735	1,656	1,696	△171	△9.16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546	576	559	568	588	42	7.69
	위탁집행형	1,195	1,220	1,228	1,300	1,326	131	10.96
기타공공기관		2,527	2,696	2,884	3,022	3,131	604	23.90
합 계		8,295	8,388	8,446	8,456	8,675	380	4.5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약 188만원으로, 2018년 대비 23만원(약 10.9%) 축소되는 등 감소세에 있음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 현황(2018~2022)

(단위: 만원, %)

구분	2018(A)	2019	2020	2021	2022(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211	196	190	187	188	△23	△10.9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2023.4.28.)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하에서는 복리후생 중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징계자에 대한 보수 지급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차등화 낮은 성과급 제도 운영 등을 분석하였음

나. 공공기관의 지침 위반 주택융자금 제도 운영 문제

- 2021.8.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대출 이자율 및 한도,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며,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주택융자금 융자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출 이자율	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하여야 함 * 분기별 연동에 관한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head> <tbody> <tr> <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 ~ 5.31.</td></tr> <tr> <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 ~ 8.31.</td></tr> <tr> <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 ~ 11.30.</td></tr> <tr> <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 ~ 차년도 2.29.</td></tr> </tbody>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준 금리	각 기관의 적용 기간	1.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3.1. ~ 5.31.	4.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6.1. ~ 8.31.	7.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9.1. ~ 11.30.	10.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12.1. ~ 차년도 2.29.
기준 금리	각 기관의 적용 기간										
1.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3.1. ~ 5.31.										
4.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6.1. ~ 8.31.										
7.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9.1. ~ 11.30.										
10.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12.1. ~ 차년도 2.29.										
대출 한도	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										
면적 요건	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주요 공공기관 중 일부는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지침상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 면적 요건 등을 위반하여 주택융자금을 운영 중
 - 대출 이자율의 경우 20개 기관이 1,754명에 대해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대출 한도의 경우 14개 기관이 1,309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 이상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면적 요건의 경우 3개 기관이 30명에 대해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 위반 주택융자금 제도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해당 기관	수혜인원
대출 이자율 미준수 (20개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1,754
대출 한도 미준수 (14개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1,309
면적 요건 미준수 (3개 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30

주: 1.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은행형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 4대 항만공사 등 14개)

2.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 대한 지침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단, 2023.7월말 기준 내부 규정을 개선한 기관 중 일부 기관은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주요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후 기간에서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2023년 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1.5%), 국립공원공단(2.0%), 한전KPS(2.0~2.25%) 등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34%)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사례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한국자산관리공사	3.3~6.7	3.3~6.7	3.3~6.7	3.3~6.7	3.3~6.7	3.3~6.7	3.3~6.7
신용보증기금	2.14	2.41	2.24	1.38	1.70	1.70	4.02
한국산업은행	1.93~ 2.81	2.18~ 2.83	1.97~ 2.80	1.43~ 2.70	1.47~ 2.48	1.84~ 4.09	2.29~ 5.7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36	3.0	3.0	3.0	3.0	3.0	3.0
한국관광공사	1.6~2.9	1.6~2.9	1.6~2.9	1.6~2.9	1.6~2.9	1.6~2.9	2.9~5.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1.8	1.6	1.6	1.8	3.5	3.5
한국전력공사	취득: 3.0 / 임차: 2.5						
한국석유공사	0.5~1.5	0.5~1.5	1.5	0.86	1.15	3.7	2.85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2.43	243~255	243~293
한전KPS	2.0	2.0	2.0	2.0~2.25	2.0~2.25	2.0~2.25	2.0~2.25
한국전력거래소	2.0~2.5	2.0~2.5	2.0~2.5	2.4~2.46	2.77~2.82	3.19~3.38	4.47
기술보증기금	3.05	3.05	2.31	1.8	2.3	2.3	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	3.0	3.0	3.0	3.0	3.0	3.0
한국수자원공사	2.0~2.98	2.0~3.22	1.58~2.08	0.88~1.38	1.33~1.83	1.85~2.35	2.0~4.41
국립공원공단	2.0	2.0	2.0	2.0	2.0	2.0	2.0
한국산업인력공단	2.6	2.6	2.6	2.6	2.6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3.5	2.9	2.9	2.4	2.4	2.9	2.9
한국공항공사	2.37	2.56	2.23	1.50	2.15	2.58	2.60
주택도시보증공사	1.0~3.0	1.0~3.0	1.0~3.0	1.0~3.0	1.5	1.5	1.5
한국부동산원	2.7	2.7	2.7	2.2	2.2	2.2	2.2

주: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일부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게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1,754명에 대해 약 1,540억원의 주택융자금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900명, 78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13명, 94억원), 한전KPS(100명, 117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80명, 58억원) 등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기관명	인원	금리	지원액
한국자산관리공사	31	3.3	3,451,278
신용보증기금	1	4.02	130,000
한국산업은행	51	2.36~5.12	3,786,9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3.0	35,000
한국관광공사	49	1.6~2.9	5,168,5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0	3.5	5,750,798
한국전력공사	900	2.5~3.0	78,213,000
한국석유공사	47	1.15~3.70	5,420,600
한국광해광업공단	92	2.43~3.42	6,077,633
한전KPS	100	2.0~4.6	11,672,900
한국전력거래소	36	2.77~4.47	2,478,520
기술보증기금	4	2.3~3.0	244,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8	3.0	1,885,000
한국수자원공사	76	1.33~4.41	7,962,000
국립공원공단	18	2.0	835,000
한국산업인력공단	33	2.6	973,500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2.4~2.9	9,360,000
한국공항공사	27	2.6	1,40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38	1.5~2.5	5,295,800
한국부동산원	29	2.2	3,844,000
계	1,754	1.15~5.12	153,984,949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주요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한도를 살펴본 결과,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게도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음

- 주요 공공기관 중 14개 기관에서 1,309명에 대해 지침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융자금의 규모는 약 1,296억원임
- 한국전력공사(816명, 741억원), 한전KPS(81명, 10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80명, 72억원), 한국수자원공사(68명, 76억원) 등

지침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사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출 한도 미준수 인원	지원액
한국자산관리공사	27	3,301,278
신용보증기금	1	130,000
한국산업은행	32	3,052,9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6	4,281,000
한국전력공사	816	74,088,000
한국석유공사	35	5,095,000
한국광해광업공단	32	3,040,000
한전KPS	81	10,471,900
한국전력거래소	26	2,202,000
기술보증기금	2	200,000
한국수자원공사	68	7,582,000
한국토지주택공사	80	7,19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36	5,203,800
한국부동산원	27	3,750,000
계	1,309	129,587,898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일부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 중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인원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음
 - 주요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총 30명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융자금의 규모는 약 25억원임
 - 한국광해광업공단(21명, 1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6명, 5억원), 한국석유공사(3명, 4.5억원) 등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에 대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사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출 한도 미준수 인원	지원액
한국광해광업공단	21	1,591,650
한국토지주택공사	6	500,000
한국석유공사	3	450,000
계	30	2,541,65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공공기관의 지침 위반 생활안정자금 제도 운영 문제

■ 2021.8. 개정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대출 이자율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할 것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출 이자율	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여야 함 * 분기별 연동에 관한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 <table> <tr> <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 <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 ~ 5.31.</td></tr> <tr> <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 ~ 8.31.</td></tr> <tr> <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 ~ 11.30.</td></tr> <tr> <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 ~ 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준 금리	각 기관의 적용 기간	1.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3.1. ~ 5.31.	4.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6.1. ~ 8.31.	7.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9.1. ~ 11.30.	10.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12.1. ~ 차년도 2.29.
기준 금리	각 기관의 적용 기간										
1.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3.1. ~ 5.31.										
4.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6.1. ~ 8.31.										
7.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9.1. ~ 11.30.										
10.1. 한은 가계대출금리	당해연도 12.1. ~ 차년도 2.29.										
대출 한도	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										

■ 주요 공공기관 중 일부는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출 이자율 및 한도 등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운영 중에 있음

- 대출 이자율의 경우 24개 기관이 10,544명에 대해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대출 한도의 경우 14개 기관이 3,459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 이상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 위반 생활안정자금 제도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해당 기관	수혜인원
대출 이자율 미준수 (24개 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10,544
대출 한도 미준수 (14개 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전KPS,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3,459

주: 1.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은행형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 4대 항만공사 등 14개)

2.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 대한 지침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
(단, 2023.7월말 기준 내부 규정을 개선한 기관 중 일부 기관은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주요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후 기간에서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2023년 1월 기준 한전KPS(1.0%), 한국주택금융공사(2.0%) 등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34%)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사례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신용보증기금	2.14~3.14	2.41~3.41	2.24~3.24	1.38~2.38	1.70~2.70	2.33~3.33	4.02~5.02
한국주택금융공사	1.7	2.0	1.8	1.8	2.0	2.0	2.0
중소기업은행	2.70~5.2	2.74~5.2	2.32~5.2	1.91~5.2	2.19~5.2	2.50~5.2	3.11~7.42
한국산업은행	2.30~3.49	2.58~3.49	2.08~3.49	1.53~3.49	1.57~2.76	1.58~3.91	2.45~5.6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	2.5	2.5	2.5	2.5	2.5	5.34
한국조폐공사	5.0	5.0	5.0	4.0	4.0	4.0	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36	3.0	3.0	3.0	3.0	3.0	3.0
한국관광공사	2.5	2.5	2.5	2.5	2.5	2.5	2.5
한국언론진흥재단	1.5	1.5	1.5	1.5	1.5	1.75	3.25
한국농어촌공사	2.5	2.5	2.5	2.5	2.5	2.5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	3.0	2.5	2.5	2.5	2.5	2.5
한국전력공사	1.75	1.75	1.75	1.75	1.75	2.2	3.0
한국전력기술(주)	2.5	2.5	2.5	2.5	2.5	2.5	2.5
한국석유공사	2.5	2.5	2.5	2.5	2.5	2.5	2.5
한국광해광업공단	-	-	-	-	2.43	2.43	2.43~2.93
한전KDN	3.0	3.0	2.0~3.0	2.0	2.0	2.0	2.0
한전KPS	0.5	0.5	0.5	1.0	1.0	1.0	1.0
한국전력거래소	1.25	1.50	0.70	0.45	1.20	2.95	5.34
기술보증기금	3.5	3.5	3.5	3.5	3.5	3.5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	5.0	4.0	4.0	4.0	4.0	4.0
한국수자원공사	2.8	2.8	2.8	2.5	2.5	2.5	2.5
한국토지주택공사	3.5	2.9	2.9	2.4	2.4	2.9	2.9
주택도시보증공사	2.5	2.5	2.5	2.5	2.5	2.5	2.5
한국부동산원	2.52	2.71	2.38	1.65	2.3	2.3	5.09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일부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게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10,544명에 대해 약 2,46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3,054명, 583억원), 한전KPS(1,337명, 164억원), 중소기업은행(1,134명, 22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918명, 314억원), 한국수자원공사(735명, 318억원) 등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기관명	인원	금리	지원액
신용보증기금	128	4.34	2,508,290
한국주택금융공사	28	2.0	840,000
중소기업은행	1,134	4.26	22,491,200
한국산업은행	474	2.46~5.21	10,638,0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9	2.5	1,702,000
한국조폐공사	92	4.0	1,703,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90	3.0	2,179,000
한국관광공사	85	2.5	2,962,792
한국언론진흥재단	30	1.75~3.5	600,000
한국농어촌공사	693	2.5	18,724,04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3	2.5	1,994,120
한국전력공사	3,054	1.75~3.5	58,270,000
한국전력기술(주)	196	2.5	3,762,000
한국석유공사	479	2.5	16,780,000
한국광해광업공단	99	2.43~3.42	2,940,000
한전KDN	293	2.0	5,680,000
한전KPS	1,337	0.5~2.5	16,359,120
한국전력거래소	31	1.20~2.95	479,930
기술보증기금	178	3.5	5,06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2	4.0	3,435,000
한국수자원공사	735	2.5	31,826,000
한국토지주택공사	918	2.4~2.9	31,446,835
주택도시보증공사	49	2.5	960,000
한국부동산원	97	COFIX + 0.75	2,767,000
계	10,544	0.5~5.21	246,108,367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주요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살펴본 결과,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게도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었음

- 주요 공공기관 중 14개 기관에서 3,459명에 대해 지침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규모는 약 1,294억원임
- 한국토지주택공사(727명, 293억원), 한국수자원공사(646명, 305억원), 한국농어촌공사(516명, 154억원), 한국석유공사(333명, 143억원), 한국산업은행(329명, 104억원) 등

지침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사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대출 한도 미준수 인원	지원액
신용보증기금	127	3,67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28	840,000
한국산업은행	329	10,427,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1	2,910,000
한국관광공사	59	2,607,093
한국농어촌공사	516	15,411,700
한국석유공사	333	14,260,000
한국광해광업공단	87	2,705,000
한전KPS	79	2,370,000
기술보증기금	163	5,03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8	3,875,000
한국수자원공사	646	30,505,000
한국토지주택공사	727	29,266,336
한국부동산원	186	5,563,000
계	3,459	129,440,229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의 문제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성 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공공기관 징계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

지침명	징계 관련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할 것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2023.7월말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음
 - 16개 주요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332명의 인원에게 약 21억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2023년 7월말 현재까지도 보수 지급 규정을 유지 중
 - 한국철도공사(96명, 305,516,000원), 한국도로공사(56명, 122,706,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36명, 440,653,000원), 국립공원공단(34명, 149,479,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30명, 117,651,000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대해 각각 보수의 90%, 기준월액의 80%를 지급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주요 공공기관 중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 인원	지급액	내부 규정('23.7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36	440,653	보수의 90% 지급
중소기업은행	25	435,379	본봉의 60% 범위 내 지급
한국철도공사	96	305,516	기본급 최대 50% 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	7	31,427	기준월액의 80% 지급
신용보증기금	7	67,686	기준급 범위 내 지급
한국주택금융공사	5	54,246	기본 연봉의 40% 범위 내 지급
한국산업은행	4	33,066	기준급의 40% 범위 내 지급
한국연구재단	1	19,485	보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4,277	연봉월액의 30%를 감액 후 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	3	58,597	월 평균임금 최대 50% 지급
한국가스공사	22	210,783	월 기본급의 50%를 감액 후 지급
한국석유공사	4	24,989	기준임금의 50%를 감액 후 지급
국립공원공단	34	149,479	보수의 최대 1/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30	117,651	기본월봉의 60%를 감액 후 지급
한국도로공사	56	122,706	월 기준급의 50%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	1	2,030	기준급의 80%를 감액 후 지급
계	332	2,077,970	-

주: 1.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은행형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 4대 항만공사 등 14개)

2. 2018.1.1. 이후 정직처분이 확정된 인원에게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 기준으로 작성
(단, 2023.7월말 기준 관련 내부 규정을 개선한 기관은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일부 공공기관은 재산·성·음주운전·부정청탁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한전KPS(81명, 201,657,000원), 한국마사회(18명, 90,694,000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3명, 87,787,000원) 등

재산·성·음주운전·부정청탁 등 비위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주요 사례

(단위: 명, 천원)

기관명	지급 인원	평가 등급	지급액
한전KPS	재산비위 11명, 성비위 3명, 음주운전 67명 (총 81명)	B 39명, C 35명, D 7명 (총 81명)	201,657
한국마사회	재산비위 4명, 성비위 13명, 음주운전 1명 (총 18명)	S 2명, A 2명, B 6명, C 1명, D 3명, 기타 4명 (총 18명)	90,69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산비위 3명, 성비위 4명, 음주운전 18명, 부정청탁 8명 (총 33명)	S 2명, A 5명, B 18명, C 8명 (총 33명)	87,787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마.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차등화 낮은 성과급 제도 운영 문제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는 6개 미만의 등급으로 운영되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의 등급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의 내용과 달리 5개 등급으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등급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급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중

2023년 성과급 제도를 6개 미만의 등급으로 운영한 대표 기관 현황

(단위: %)

기관명	구분	첫째 등급 인원 비율	둘째 등급 인원 비율	셋째 등급 인원 비율	넷째 등급 인원 비율	다섯째 등급 인원 비율	여섯째 등급 인원 비율
한국자산 관리공사	경영평가 성과급	11	15	50	13	11	-
한국장학재단	내부평가급	5	15	60	15	5	-
한국언론 진흥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10	12	56	12	10	-
	내부평가급	10	12	56	12	10	-
한국마사회	2급 이상 경영평가급	12	20	39	19	10	-
한국인터넷 진흥원	경영평가 성과급	10	20	40	20	10	-
신용보증기금	경영평가 성과급	6	18	57	12	6	-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2급 이상 내부평가급	11	21	39	19	10	-
	3급 이하 내부평가급	10	41	32	17	-	-

■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는 등급 간 지급률의 차등화가 부족하였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첫째 등급부터 다섯째 등급까지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주) 등은 첫째 등급의 지급률이 다섯째 등급 지급률 대비 각각 118%, 136%, 127% 등의 수준에 그쳐 차등화가 부족하였음

2023년 등급 간 지급률의 차등화가 부족한 대표 기관 현황

(단위: %)

기관명	구분	첫째 등급 지급률	둘째 등급 지급률	셋째 등급 지급률	넷째 등급 지급률	다섯째 등급 지급률	여섯째 등급 지급률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4급 이하 경영평가급 및 내부평가급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0
한국수력 원자력	4직급 이하 내부평가급	일괄 200%의 지급률 적용					0
한국가스 안전공사	직원의 경영평가급	일괄 70%의 지급률 적용					0
국가철도공단	3급 이하 내부평가급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호봉제 내부평가급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한국토지 주택공사	내부평가급	일괄 200%의 지급률 적용					0
한국자산 관리공사	4~6급 내부평가급	109	104	100	96	92	-
한국가스공사	호봉제 내부평가급	288	269	250	231	212	0
한국전력기술(주)	3직급 이하 경영평가급	224	212	200	188	176	-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발간일	2023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2090·1173)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56-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2040-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